

개정 정치관계법 해설

(공직선거법·정치자금법·정당법)

2009. 1. 1

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

공직선거법 개정 사항

〈정책선거 지원〉 (제7조제2항)

[신설]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적으로 정책선거 촉진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필요 경비 지원 가능

○매니페스토 운동단체 등, 후보자 공약평가, 정책선거 요구 높아질 것으로 예상

〈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〉 (제8조의2제1항)

[수정]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 까지 운영, 보궐선거등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 까지 운영

○(현행)임기만료 선거일전 120일까지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

〈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〉 (제8조의2제2항)

[추가] 교섭단체 구성 정당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, 방송사·방송 학계·대한변호사협회·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 9명 이내로 구성

○중앙선거관리위원회, 방송사 추천을 새로 추가

〈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〉 (제8조의3제2항)

[추가]교섭단체 구성 정당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각 1명, 언론학계·대한변호사 협회·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 9명 이내로 구성

○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을 새로 추가

〈구·시·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〉 (제8조의7제2항제2호, 제3항)

[수정] 해당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정당추천위원을 포함한 위원 3 명, 학계·법조계·시민단체·전문언론인 중에서 해당 선관위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. 위원장은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장이 겸임함

○새로 규정. 현행은 교섭단체 구성 정당, 공영방송사, 방송위, 학계, 법조계, 시민단체 추천 등 중앙 및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 위원회와 같음.

〈선거부정감시단 구성 인원〉 (제10조의2제2항)

[수정]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내로 구성

○(현행)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

〈경합범 분리선고 대상 추가〉 (제18조제3항)

[신설] 선거사무장, 회계책임자,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도 선거관련 죄와 다른 죄를 범한 경합범인 경우 분리선고 대상에 추가

○현행은 관련 규정 없음

〈시·도의회 의원정수〉 (제22조제1항, 제3항)

[수정]

- 시도별 지역구 시·도의원 총정수는 관할구역 자치구·시·군수의 2배수로 함
- 정수는 인구, 행정구역, 지세, 교통 등을 고려해 10%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
- 자치구·시·군의 지역구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함
- 광역시 및 도의 최소 의원정수는 19명으로 함

○헌법재판소는 인구비례가 아닌 행정구역별로 시도의원 정수를 2인으로 배분한 현행 공선법 제22조제1항 때문에 인구편차에 의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위헌 선언(2007.3.29). 이에 따라 선거구, 최소 정수 등을 조정함.

○개정안에 따른 지역구 도의원 정수는 현행 626명(제주제외)에서 650명으로 증가

○(현행)

- 시도별 지역구 시·도의원 총정수는 관할구역 자치구·시·군 마다 2인으로 함
- 광역시 및 도의 최소 의원정수는 16명으로 함

지역	현행	개정	증감	지역	현행	개정	증감
서울	96	96	-	강원	36	38	+2
부산	42	42	-	충북	28	28	-
대구	26	26	-	충남	34	36	+2
인천	30	30	-	전북	34	34	-
광주	16	19	+3	전남	46	50	+4
대전	16	19	+3	경북	50	52	+2
울산	16	19	+3	경남	48	49	+1
경기	108	112	+4	제주	16	*	-

*제주도의회 의원정수는 2006년 2월 24일 제정된 “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”에 따라 지역구 29인임.

〈선거구획정안 제출 시한〉 (제24조제7항)

[수정]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6월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 함

○(현행) 선거일 전 1년까지 제출

〈지방의회 여성참여 확대〉 (제47조제5항)

[신설] 정당은 광역의원 선거 또는 기초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 원지역구 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함

○신설조항. 애초 위원회최종안은 이를 위반 시 해당 지역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제52조(등록무효)에 신설하였으나 본회의 최종안에서는 삭제, 위 내용을 사실상 ‘권고’ 수준으로 남겨둠.

○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은 해당 법에서 강제성 없는 권고 사안에 대해 ‘노력하여야 한다’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, 위 조항은 제52조에 규정한 등록무효 항이 긴급하게 삭제되면서 정리되지 못한 채 예외적 문구로 남음.

〈입후보자 사퇴시한 및 적용대상 추가〉 (제53조제1항)

[수정] 제53조제1항제1호에서 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

[신설] 적용대상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국가 또는 지자체 출연,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(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, 새마을운동협의회, 한국자유총연맹)의 대표자를 추가함. 시·도 및 구·시·군 조직 포함

○현행은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만두어야 하며, 국민운동단체 대표자는 적용이 안되고 있음

○따라서 해당자는 3월 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

〈후보자 등록시 기탁금 납부〉 (제56조제1항)

[신설] 후보자 등록시 예비후보자 등록시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함

〈기탁금 반환〉 (제57조제1항)

[신설] 당내경선 결과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시 납부한

금액 전액을 반환함

[신설] 비례대표선거에서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으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. 단, 당선인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함

〈공무원 당내경선운동 금지〉 (제57조의6)

[신설]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운동도 할 수 없음.

[신설] 단,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가능

[신설]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해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.

○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강화

〈선거운동 허용대상 확대〉 (제60조제1항)

[신설]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예비후보자·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 선거운동 허용

[신설] 법에 규정된 사퇴 기한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선거운동 허용

〈예비후보자 등록기간〉 (제60조의2제1항)

[수정] 지역구시·도의회의원선거, 자치구·시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,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개시일 전 60일

○(현행) 모두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

○이에 따라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·교육의원은 2월 19일부터(군 지역은 3월 21일부터) 예비후보 등록 ※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2월 2일부터 등록

〈예비후보자 기탁금 납부〉 (제60조의2제2항)

[신설]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시 선거 기탁금의 20%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

[신설] 전과기록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

○예비후보자 등록 요건 강화.

○사퇴, 등록무효, 미등록 시 반환 안됨. (당내경선 낙선 또는 사망 시는 반환)

○이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시 납부 기탁금은 기초의원 40만원, 광역의원 60만원, 기초자치단체장 200만원, 광역자치단체장 1천만원.

〈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〉 (제60조의3제1항, 제2항)

[신설]

- 어깨띠, 예비후보자를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허용
- 후보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 이용 허용
-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정보 전송 허용. 컴퓨터(이용기술) 활용은 5회로 제한
- 명함배포, 지지호소 행위 허용 대상자 추가, 확대
 - :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
 - :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·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
 - : 예비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

〈선거운동기구 설치 확대〉 (제61조제6항)

[신설]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설치하는 간판, 현판, 현수막, 선전벽보 등의 개수 제한 폐지

[신설]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는 간판, 현판,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음

〈선거사무관계자수 확대〉 (제62조제1항)

[추가]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두는 구·시·군안의 읍면동수의 3배수 이내에 5 를 더한 수

[신설] 장애인(예비)후보자를 보조하기 위한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않음

○선거사무관계자수 3명 증원

〈(점자형)선거공보〉 (제65조제1항, 제4항, 제7항)

[수정]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책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음

[수정] 점자형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함

[수정]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 게재하여야 함

○(현행) 선거공보의 ‘중’ 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개정안은 1종으로 제한함

○(현행) 현행 점자형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 내용을 줄이거나 같게 작성하고

게재 면수에 대한 규정도 없으나, 개정안은 책자형 선거공보와 다른 내용의 기술도 허용하고 있으며, 그 면수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넘지 못하도록 함.
○(현행) 현행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게재 면을 지정하지 않고 있음

〈선거운동 도구〉 (제68조제1항)

[추가] 윗옷, 표찰, 수기(手旗), 마스코트 등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

○(현행) 어깨띠 외에 추가 허용된 선거운동 도구들임.

〈신문광고 규격제한 폐지〉 (제69조제2항)

[수정] 신문광고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만 표시, 규격제한 폐지

○(현행) 가로 37센티미터, 세로 17센티미터 규격 제한

〈시·도지사선거 방송광고 허용〉 (제70조제1항제3호)

[신설] 시·도지사선거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5회 이내로 지역방송 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를 허용함

〈방송연설 방영정보 확대〉 (제71조제4항)

[추가] 텔레비전 방송연설시 후보자의 성명, 기호, 소속정당명(마크, 심벌 포함), 경력, 연설요지, 통계자료의 방영 허용

○현행은 후보자와 연설원의 모습만 방영을 허용하고 있음

〈공개장소 연설·대담시 사용 음악〉 (제79조제10항)

[수정] 모든 음악의 사용 허용

○현행은 당가, 정당 또는 후보자 홍보 내용의 음악으로 제한

〈대통령선거 대담·토론회 확대〉 (제82조제1항)

[수정] 언론기관은 대통령선거일 전 1년부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·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음

○(현행) 대통령선거일 전 120일부터 개최

〈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〉 (제82조의2제1항제2호)

[수정] 비례대표후보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1인 또는 여러 명(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 제외) 초청 가능

- (현행) 비례대표후보 가운데 1인 또는 수인
- 비례대표후보가 참석하지 않을 수 있어 후보검증 기회 축소

〈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〉 (제82조의4제1항)

[신설] 전화를 이용해 후보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 허용
[신설]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정보 전송 허용. 컴퓨터(이용기술) 활용은 5회로 제한

〈인터넷언론사 게시판 실명확인 대상 확대〉 (제82조의6제1항)

[수정] 문자·음성·화상·영상(이하 “정보등”) 등의 정보

- (현행) ‘글’ 만 규정

〈무소속후보자의 지지정당 표방 허용〉 (제84조제2호)

[신설]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이 지지, 지원하는 경우 무소속후보자는 그 사실을 표방할 수 있음

〈지방자치단체장의 언론·방송 출연 제한〉 (제86조제7항)

[신설]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사무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·신문·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음

〈야간연설 제한〉 (제102조제2항)

[신설] 공개장소에서의 연설·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음

〈사설모임 개최제한 폐지〉 (제103조제3항)

[수정]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는 향우회·종친회·동창회·단합대회·야유회 등

의 집회나 모임 개최 허용

○(현행)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 실시지역 안에서 향우회·중친회·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음.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단합대회·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음

〈행렬인원 확대〉(제105조)

[수정]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, 후보자가 함께 있는 경우 후보자를 포함해 10명까지 행렬 허용

○(현행) 2명, 후보자가 함께 있는 경우 후보자를 포함해 5명 까지 허용

〈당내경선 여론조사 허용〉(제108조제2항)

[신설] 당내경선에 따른 여론조사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라도 후보자, 정당 명의로 진행 허용

〈여론조사 신고 규정〉(제108조제3항)

[신설]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·단체, 정당, 방송사업자, (인터넷)신문사업자, 정기간행물사업자, 뉴스통신사업자를 제외한 자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당선예상, 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관위에 서면 신고

〈여론조사 실시 금지시간〉(제108조제5항)

[신설]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 실시 금지

〈허용 기부행위〉(제112조제2항제1호)

1. 통상적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

-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 지원 허용
- 창당대회, 당원집회 및 교육 등에서 통상적 범위의 음료 제공 허용(주류 제외)
- 정당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식사료 제공 허용
- 교육·연수에 참석한 유급사무직원에게 숙식·교통편의·여비 제공 허용
- 정당 대표자가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신년회·송년회에 참석한 사람에

게 다과류의 음식물 제공하는 행위 허용

- 대민 자원봉사활동 참석 당원에게 교통편의(여비 제외), 식사류 제공 허용
- 정당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책개발 간담회·토론회 참석자에게 식사류 제공 허용
- 정당 대표자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모범·우수당원에게 상장과 통상적 부상 수여하는 행위 허용

2. 의례적 행위

-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게 식사류 제공 허용
- 국회의원·(예비)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할 때 함께 다니는 자에게 식사류 제공 허용
- 구·시·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(사적모임 제외)의 정기총회에 의례적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해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허용

3. 구호적·자선적 행위

-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연·구호금품 제공시 직명·성명·소속정당의 명칭 표시 행위는 금지

4. 직무상의 행위

-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는 무료 민원상담행위 허용
-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 민원상담행위 허용

○신설, 추가, 완화 허용된 기부행위

〈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지 행위〉 (제112조제4항)

[신설] 법으로 허용된 기부행위를 행함에 있어 대상, 방법, 범위, 시기 등을 법령,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

[신설]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의 선전 행위가 있는 경우

〈선거비용의 정의〉 (제119조제1항제2호)

[신설]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

〈선거비용의 보전〉 (제122조의2제2항, 제3항)

[신설]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제출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보전하지 않음

[추가]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(배우자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, 회계책임자 제외)가 부담하는 휴대전화 통화료는 보전함

[신설]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는 국가가 부담함

〈정강·정책홍보물〉 (제138조제4항, 제5항)

[추가] 정당이 선거기간중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 소속당원에게 정강·정책홍보물을 배부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부를 제출하거나 전자적 파일로 대체할 수 있음

[신설] 위 정강·정책홍보물에는 후보자의 기호·성명·사진·경력 등을 제외하고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

〈당원집회 개최신고 완화〉 (제141조제2항)

[수정] 선거일 전 90일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만 관할 선관위에 신고
○(현행) 시기 관계없이 당원집회 개최 시 관할 선관위에 신고 의무화

〈당사게시 선전물의 제한 완화〉 (제145조제1항)

[추가] 정당은 선거기간 중 구호, 대표자 성명,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·성명·사진·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·현판·현수막 설치·게시 가능

〈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회피〉 (제147조제4항)

[추가]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함(부득이한 경우 제외)

〈장애인생활시설 기표소 설치 의무화〉 (제149조의2)

[신설] 30명 이상의 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은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함

[신설] 후보자·선거사무장·선거연락소장은 30명 미만의 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시설의 장에게 기표소 설치 요청 가능.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의 장은 이를 따라야 함

〈투표용지 게재순위〉 (제150조제5항, 제7항)

[수정]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관위에서 추천하여 결정

[신설] 기초의원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에 정당이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게재순위는 정당이 정하거나 관할선관위에서 추천하여 결정

○(현행)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으로 결정

〈부재자투표자의 투표소 투표〉 (제156조제3항제3호)

[신설]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았지만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

〈투표참관인수 축소〉 (제161조제3항)

[수정]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8명으로 함

○(현행) 투표소마다 12인

〈지방자치단체장 무투표 당선 허용〉 (제191조제2항 삭제)

[삭제] 현행 규정 삭제, 무투표 당선 허용

○(현행) 후보자수가 1인인 경우 투표자총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시 당선 결정

〈비례대표의원 승계〉 (제200조제2항)

[수정] 비례대표의원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 궐원이 생긴 때에는 승계하지 않음

○(현행)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, 정당 해산,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 궐원이 생긴 때에는 승계하지 않음

○2009년 10월 29일,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결과 반영(친박연대 비례대표 승계)

〈재외 선거운동 금지 단체〉 (제218조의14제6항)

[신설] 한국국제협력단, 한국국제교류재단, 재외동포재단의 상근 임·직원과 대표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.

〈과태료 부과〉 (제261조제2항)

[신설]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·토론 불참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[수정] 기부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 상한선은 3천만원으로 함

○(현행) 50배의 과태료 부과

〈낙선 선거범죄자 비용반환〉 (제265조의2제1항)

[신설] 당선되지 않았어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반환·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함.

〈보궐선거 출마 금지〉 (제266조제2항)

[신설] 당선되지 않았지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
[신설] 다른 공직선거 입후보를 위해 임기 중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·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

정치자금법 개정 사항

〈당비·정치자금 영수증 교부 예외규정〉 (제5조제1항, 제17조제5항)

[수정] 연간 납부 당비, 후원금 액수에 상관없이 당원 또는 후원자가 영수증 수령을 원치 않는 경우, 후원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당비·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발행하여 원부와 함께 보관 가능

○(현행) 연간 10만원 이하의 당비(후원금)를 납부한 당원(후원인)이 영수증 수령을 원치 않는 경우 적용

〈기초자치단체장후보자 후원회 설치〉 (제6조제6호, 제12조제1항제5호)

[신설]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후원회 설치 허용

[신설] 모금 상한액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

○(현행) 국회의원, 국회의원 (예비)후보, 대통령선거 (예비)후보,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후보, 중앙당 대표선출 당내 경선후보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선거 후보자만 허용.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는 금지

○2006년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4천7백8십만8천원.

〈후원회의 선거운동〉 (제14조)

[삭제] 현행 제14조제2항을 삭제, 허용

○(현행) 후원회는 후원금 모금이나 회원모집의 기회를 이용해 정당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·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·추천하거나 그 밖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
〈후원회 인쇄물〉 (제15조)

[추가] 후원금 모집을 위한 인쇄물·시설물에 후원회지정권자의 사진·학력·경력·업적·공약과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음(후보가 되려는 자 포함, 대통령 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는 금지)

○(현행) 후원회명, 후원금 모금의 목적, 기부처, 기부방법과 회원모집 또는 모금호소내용만 허용

〈정치자금 영수증 발행 편의 제공〉 (제17조제13항)

[신설] 후원회는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해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음. 해당 금융기관은 “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” 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함

[신설] 요청 서식과 필요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함

〈장애인추천 보조금〉 (제26조의2)

[신설]

-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장애인추천 보조금 지급

-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있는 해 예산에 계상함

-총액의 100분의 50을 광역, 기초의원선거 각각의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함

1. 전국지역구총수의 5%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

：총액의 50%는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

：잔여분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

2. 전국지역구총수의 5%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

가. 3%이상 5%미만 추천 정당에게는 1호 기준에 따라 배분

나. 1%이상 3%미만 추천 정당

：총액의 30%를 1호 기준에 따라 배분.

：이 경우 가목에 의해 정당에 배분되는 금액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음

-지급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완료함

○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는 3,779만 6,035명

○따라서 내년에 배정될 예상 장애인추천 보조금은 7억5천5백9십2만7백원

〈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 보호〉 (제27조의2)

[신설]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.

〈연구소 해산·소멸에 따른 보조금 반환〉 (제30조제1항)

[신설] 정책연구소가 해산 또는 소멸하면 보조금 사용잔액을 소속 정당에 인계. 정당은 새로 설립하는 정책연구소에 잔액을 인계하여야 함.

○(현행) 규정 없음.

〈회계책임자 외의 지출 허용〉 (제36조제1항제2호)

[신설] 회계책임자의 관리·통제아래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·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경우는 회계책임자가 아니어도 지출 가능

〈후원회 등록 전 허용 가능한 지출〉 (제36조제5항)

[신설]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(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판매 가능한 예비후보자공약집 제외)에 대한 지출은 후원회 등록 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더라도 기부받은 후원금 사용 가능

〈보전대상 제외 과태료 위반자 확대〉 (제51조제4항)

[추가] 후보자, 선거연락소장, 회계책임자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기탁금이나 보전비용에서 공제함

정당법 개정 사항

〈유급사무직원 정의〉 (제30조제4항)

[추가] 근로에 대한 대가 제공 없이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만 지급받는 정당
당의 간부